지자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

대중운동 강화의

민중, 철의 전선 형성

지자제 참여형태

참여전술 독자적정치세력화에 기초해야

선거공간 통해 생존권투쟁 촉발될 듯

30년만에 실시되는 지자제에 대해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들은 선거가 실시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제반 사회적 모순이 종식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지자제선거를 활용하여 임금인상의 요구 정당성과 현 정권과 자본가들의 노동운동탄압의 부당성을 선전함으로써 임금인상투쟁의 승리와 민중운동 발전의 유리한 계기가 되리라 믿고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수서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진상규명요구를 무마시키기 위해 지자제 기초의원선거를 광역과 분리하여 오는 26일 실시하기로 기습공격을 감행했다. 이러한 현 정권의 음모에 대해 국민들은 수서비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지자제 기초의원선거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연합, 민중당등 민중운동세력 또한 선거참여거부를 표명했다.

이번 지자제는 6월 민주대항쟁에서 얻어진 투쟁의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민당과 집권민자당의 협상에 의해 법제화된 지자제선거법은 민중의 투쟁성과가 담겨지지 않았으며,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온갖 장애가 가로놓아져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외세와 독점자본에 의해 민족의 자주권과 민중의 생존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선거를 통한 사회모순의 해결이란 전혀 있을 수 없다. 특히 이번 지자제선거는 지역단위로 실시되기 때문에 지역적 권한을 둘러싼 비정치적 형태로 실시됨으로 대통령선거및 총선과 비교해 보면 그 한계는 명백해진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적극적 의의가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첫째, 지자제선거투쟁은 민족민주운동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한다.

선거기간동안은 민중들의 생존권쟁취투쟁에 대한 현 정권의 탄압이 일정정도 완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국면 시켜낼 수 있기에 선거참여투쟁을 현 정권퇴진 투쟁에 복무하도록 배치해나가 지자제의 의의를 극대화시켜나가야 하겠다.

이번 선거가 국민적으로 타오르는 수서비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요구를 은폐하기 위해 기초의회의원선거가 조기에 분리 실시되고 있다. 우리는 수서비리의 진상을 규명하는 투쟁이 현 정권을 보다 더 타격해나갈 수 있다고 에서 민족민주운동의 대의를 선전해나가면서 민중들의 요구를 촉발 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자제 선거를 통해 압승을 거둠으로써 내각제개헌을 통한 장기집권음모를 분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민자당이 위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민족민주운동의 대응을 조직하지 않을 경우, 지자제선거결과가 나온 이후의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맞서 싸워나가는데 일정한 제약이 있다.

셋째, 지자제 선거는 민주진영이 일정정도 지방의회에 진출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향후 의회활동을 통해 부르조아 정치의 한계를 폭로하고 제반 활동을 통해 파쇼정권을 포위공격해 나가는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

이상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았을때 일정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운동진영이 현정권의 장기집권음모를 일정하게 봉쇄하고, 대중적기반을 강화에서 일정하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주로 광역의원선거와 관련되어 실천적으로 제기된 쟁점으로 후보전술문제가 있다.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전술한 지자제선거에 의의와 한계를 보면, 참여투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당연히 민중진영의 정치적 독자성에 기초한 후보가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민중운동은 자신의 투쟁강령을 국민대중에게 제기하고 지지받을 수 있으며 합법영역에서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파쇼민자당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범민주진영의 연합 즉 후보조정을 통해 파쇼정권에 반대하는 선거공동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인천지역을 필두로 마산·창원지역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 파쇼를 약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선거라는 확대된 정치공간에서, 노동자, 도시빈민등 민중들은 자신들의 생존권 요구를 제기하고 쟁점화시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정선거 감시운동, 민자당후보나 어용 후보를 낙선시키고, 민중후보나 범민주진영의 후보를 당선시켜 민중의 요구를 대변하게 하는 등의 제반 대중운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 정 수

〈국민연합 민생특위원〉

보며, 위와 같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선거거부를 해나가야 한다.

단, 지역과 부문에 따라 '국민대중'의 추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고 수서비리를 폭로, 선전하는 차원

해방이후 지자제 변천과정

'관치적 자치'로 변질된 위상

'인민위원회'주민자치의 모범 창출해

미군정이후 집권세력 장식물로 전락

모든 민주주의 제도가 그렇듯 지자제 역시 역사발전의 필연적 산물이므로 그 근본 성격의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성까지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 발전이 갖는 보편적 의미에서 지자제를 이해해야하며, 그것이 우리사회의 역사발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가를 동시에 알 필요가 있다. 즉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자신들의 주권실현을 어떻게 모색하여 왔으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진정한 지자제의 실현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가, 또 국민들이 이러한 권력의지가 집권자들에 의해 어떻게 왜곡되어 왔는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과학적인 해명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다소간 돕기 위해서 해방이후 군정기간 그리고 이승만및 장면 정권하의 지방자치를 국민과 지배집단간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촛점을 두고 국민의 권력의지와 정치적 지향점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마디로 8.15해방이라는 상황은 우리민족에게 '일제 잔재의 청산'과 '새조국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안겨 주었으며 이러한 과제는 일제의 민족차별에 신음해 온 노동자, 농민 그리고 민족해방 운동가들로 하여금 가장 먼저 떨쳐 일어나게 하였다. 이 시기가 다소 '혼란과 무질서'로 비춰지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새국가 건설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려는 국민의 정치의식의 발현으로서, 논자에 따라서 평가가 나뉘기는 하지만 '지방인민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역사에 묻혀버린 그 당시 지방인민위원회는 구성, 활동, 존속기간 등에 있어서 각 지역의 특수성, 지배세력의 분포, 산업발달의 정도, 지리적 위치등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민족 부분의 배제'와 '중앙과 지방차원에서의 국민주권의 실현'을 지향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특히 인민위원회의 지도자들은 읍·면단위에서 지역주민들의 보통·직접선거로 선출되었으며, 직능대표와 대중단체의 대표도 다양한 주민이익의 반영을 위해 참여하는 등 애초부터 상향적·직접적으로 조직되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임에도 주민들의 지지속에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45년 9월에 진주한 미군은 점령지의 통치형태로서 군정을 실시하고 미군정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함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차원의 모든 정치행위를 불법화함으로써 해방직후 국민주체의 지방자치의 실현은 좌절되었고, 이후부터의 지방자치는 집권세력의 장식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아직까지 평가에 있어서 논의가 분분한 인민위원회를 거론하는 이유는 이론적 측면에 있어서 부족하고 원시적 형태이지만 지방자치의 본질 내지 원칙에 있어서는 이후의 경우에 비해 오히려 충실한 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미군정의 비호아래 탄생한 이승만 정권이 1949년 7월 제헌헌법 제97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법을 형식상 제정·공포하기는 하였지만 '국내치안의 불안과 중앙행정체계의 미정비'를 내세워 지방자치를 즉각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자신들의 대중지지기반이 취약하여 지방자치의 즉각 실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무겁고 두려웠던 관계로 지방자치법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개정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승만 정권은 재집권을 위한 개헌안 통과의 사전 포석으로 조작된 민의의 과시가 필요하였던 관계로 지방자치를 '6.25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속에서 강행하였다. 즉 지방의회를 통해 '국회해산 결의문'을 채택하게 하면서 '부산정치 파동'의 와중에서 대통령직선제를 관철시킨 것이다.

물론 이승만 개인의 정권욕에서 출발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우리 현대사에서 최초로 주민직선으로 지방정부가 구성되었다는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현실정치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력을 수직적으로 분립하게 하는 참다운 지방자치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독재정권의 장식물로서, '법치'를 내세운 국민탄압과 감시체제를 통해 국민의 대표선임권마저 박탈하는 독재정권의 '집권연장 놀음'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수차에 걸친 법개정으로 그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채 '관치적자치'로 전락하였던 지방자치가 다행히 '4월 혁명'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논란끝에 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아니고서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없다는 결론속에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확정·시행되었지만 이번에는 '쟁취한 민주화'를 스스로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민들에게서 문제가 생겼다. 낮은 주민의 자치의식 수준과 법률 등 제도적 미비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많은 결점만 노정함으로써 충분한 시행착오를 거쳐 볼 시간적 여유를 갖기도 못한 채 민주화의 역사를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만들고만 '5·16군사쿠데타'라는 역사의 반동이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만것이었다.

무릇 어제의 역사는 오늘과 내일의 소중한 가치판단의 준거가 된다는 면에서 소중한 것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착근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과거의 잘못을 극소화하는 예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송 창 석

〈한성대강사·행정학〉

신TK대권 향한 출사표

선거이후 정세 전망

Ⅰ. 제도정치권의 정치역학

그동안 '실시하느냐 마느냐', 또 실시한다면 '언제 하느냐'를 두고서 여야간에 말이 많던 지방자치제(이하 지자제)가 26일의 기초의회선거를 필두로 30년만에 부활될 전망이다. 그러나 26일로 지방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한국사회에 지자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점을 들 수 있

첫째, 기초지방의회 선거는 마지못해 치르더라도 6월로 예정된 광역의회선거, 특히 1992년 상반기로 예정된 자치단체장 선거만은 어떻게든 치루지 않겠다는 것이 민자당의 지자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해서 민자당은 노골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는 만약 지자제가 실시되어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특별시장, 직할시장등 자치단체장을 지역 주민이 선출할 경우, 내무관료들은 더이상 출세를 위해 중앙권력에 과잉충성하지 않을것이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까지 통·반장을 동원한 관권선거도 기본적으로 통·반장이 내무부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다면 누가 단체장이 되건 재선을 위해서는 중앙권력이 아닌 지역주민의 뜻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서 민자당이 자치단체장 선거를 지방의회 선거와 분리하여 가능하면 치루지 않으려고 하는 근거가 주어진다.

둘째,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자당의 입장에서 자치단체장 선거의 실시는 바로 장기집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인만큼, 지배세력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자제 선거를 이번의 기초의회 선거로 끝내려는 노력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항간에 떠도는 '평민당과의 제2보수연합'은 이러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물론 이는 민자당이 지방의회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즉 평민당이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서도 지역당으로서 이미지를 벗지 못한 채 고립화되고, 더불어 민주당의 비호남야당으로서의 복원 실패, 재야를 비롯한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때, 민자당은 더욱 입지가 좁아진 평민당을 상대로 제2차 보수연합을 단행할 것이다. 또한 민자당은 이를 토대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공수표'로 돌릴 것이다.

Ⅱ. '신주류'의 지방자치제 전략구조

이와 관련하여 지자제 선거가 왜 3월에 조기 분리실시되게 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이후의 정세전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애초에 기초 및 광역의회의 3월 동시실시라는 민자당의 당론이 5~6월 실시로 바뀐 것이 수서사건으로 의한 국민들의 감정을 치유하고 양당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시간벌기'라는 계산하에 의도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3월의 기초의회 조기분리실시는 바로 이러한 시간벌기라는 의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작적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지자제 분리실시는 여권의 신주류(신TK로 분류되는 박철언 체육청소년부 장관, 김영일 청와대 사정수석, 안기부의 서동권 부장·손진곤 특보)와 공안파 친위내각(12·27내각개편으로 인한 노재봉내각)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이다. 이들은 지자제 선거에서

'장기 신

신용사회를 이룩합시다.

철저한 아프터 써비스

종합사무기 클로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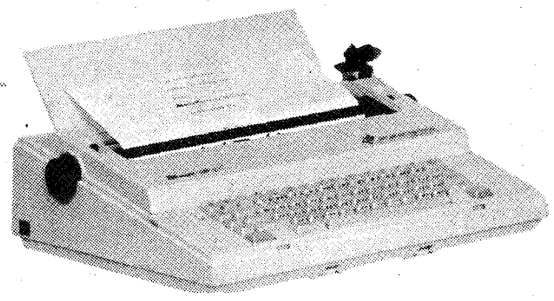
이 광고는 (두번) 다시는 나가지 않습니다!

28% 할인(3개월~12개월 분할판매)

스미스 코로나
(SD-700)

₩385,000(VAT 별도)
●28% D/C ₩277,200
●한·영 겸용 2벌·4벌 겸용
●메모리, 디스플레어

스마트 맨
(MT-700)



₩235,000(VAT 별도)
●28% D/C ₩169,200
●한·영 혼용타자기
●자동지우개장치

종합사무기 클로바
전시장 : 741-3166~7
745-3846~7
FAX : 745-3848
※ 종로3가 3호선전철역 지하상가내

서울지역 구입처 741-3166~7
구주 O·A 776-1981~2
삼성사무기 755-3763
반도 O·A 925-5462
강남사무기 549-7400
대동 O·A 745-9294
골드비지니스 547-7041